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 갈등...인수인계 차질 우려

文-尹 청와대 회동 무산 '통합·협치' 초반부터 험로

인사문제·'동시 사면론' 이견 "알박기 인사" vs "점령군이나"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날 첫 회동이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취소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

거 일주일 만에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발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이슈에 대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동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인사는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임기 내에서의 인사권은 문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사면 문제 역시 점점 꼬여가는 듯한 모습이 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여야 내부 모두에서 동시사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고받기식' 사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가뜩이나 예민한 문제"라며 "양측 지지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동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감점싸움으로 번질 조짐까지 감지된다.

일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라며 사면을 해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고 하더니, 인사권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점령군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단기간에 다시 잡힐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처럼 정권교체기 힘싸움이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측이 공언했던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 내에서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선을 그냥 원칙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식사 후 산책하는 윤석열 당선인(가운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朴브레인' 2인방 정책특보로... '쓴소리 특보'엔 DJ맨 발탁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정무특보 DJ계 장성민 MB계 출신 특별고문 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강석훈·김현숙 전 의원을 정책특보로 발탁했다.

강 전 의원은 '박근혜 인수위'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았고 2016~2017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 파트를 담당,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렸다. 19대 국회에서 서울 서초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복지·연금 분야 전문가로서 저출생·보육 공약을 뒷받침했다.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김 전 의원 역시 내각이나 청와대 기용 가능성이 있다.

정무특보로 발탁된 장성민 전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DJ)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 특보로부터 가장 많은 조언을 듣고 소통해왔다. '쓴소리 특보'라고 불리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새로 발탁된 7명의 특별고문 인선을 보면 MB

(이명박)계 기용이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과 'MB의 입'으로 불렸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특별고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의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지원했으며 올해 초 선대위 개편 뒤에는 상임고문을 맡았다. 이 전 수석은 당 선대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전 의원도 특별고문에 포함됐다.

과거 민주당의 '입' 역할을 했던 호남 출신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등도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게 됐다. /연합뉴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표명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 통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낮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메일에서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3·9 대선을 앞두고 지난 4·5일 진

행된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여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백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확진자 투표 인원 예측에도 실패하면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투표장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노출됐고, 야당은 중심으로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중앙선관위를 향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합당 반대...제명 요구"

기득권 양당 회귀 수용 어려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에 대한 당의 제명을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단일화 선언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첫발을 떼었고, 합당 논의를 시작하게 돼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단일화 공동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전제된다"면서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 양당

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성과와 성공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정치인으로서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이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상처를 드러 죄송하다"며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즘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 전원 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정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정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광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